

지역운동과 여순사건

이영일

여수는 긴 역사에 비해 비교적 운동의 토대가 척박한 곳이다. 거기에는 그만한 역사적 배경과 현실적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필자가 속해 있는 본 연구소를 비롯하여 여러 NGO들이 설립될 1995년 당시만 해도 여수는 운동의 토대가 매우 척박한 곳이었다. 지금은 여러 NGO들의 활동에 힘입어 시민운동이 약진하며 정착되고 있기는 하지만, 당시에는 그러했다.

특히 여순사건의 후유증으로 인한 레드 콤플렉스와 연좌제 등은 대단한 금기 사항이어서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함부로 나서지 말라는 주의가 지역에 팽배해 있었다. 그런가 하면 198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한 여수국가산업단지 사택 중심의 도시문화가 퍼져 있었고, 이들 거주민의 대부분이 외지인들이었기에 지역의 현안과 문제는 도외시한 채로 지역 공동체이기를 거부하는 모래알 같은 유목민 상태였다. 그러한 토대와 조건 속에서 이제는 10여 개의 NGO들이 벌써 9년째 자기 활동을 하고 있으니 감회가 새로울 뿐이다.

9년이라는 세월은 참으로 많은 것을 변하게 했다. NGO들이 양질적인 시

민운동으로 발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을 불온시하는 일도 없게 되었으니 말이다. 아니 이제는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계속 집권하고 있는 세상이다. 조금의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연거푸 내리 세 번 민주화 운동세력들이 집권하고 있다. 그러니 세월은 진정 변한 것이 아니던가?

지역의 정체성과 여수의 역사 개요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이 있다. 지역적인 것이란 지역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곧 지역의 역사와 전통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당연한 논리로 우리 지역운동의 발전 방향은 지역의 정체성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지역이 가지는 정체성은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여수의 역사는 참으로 질기고 장구한 저항과 항거의 역사이다. 옛부터 물이 좋아 살기가 좋았던지 선사 유적인 고인돌이 즐비한데 그동안 우리의 무지로 인해 도시개발과정에서 많이 훼손되고 파손되었건만 아직도 1,500여 기 이상의 고인돌이 남아 있다. 그 이후의 역사는 거의 저항과 항거의 역사로 점철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백제시대에는 사대주의의 원조인 신라의 삼국통일에 편입되기를 거부한 최후 저항지로, 여말선초(麗末鮮初)에는 이성계의 역성혁명에 반기를 들어 신생 조선왕국의 인정을 거부한 최후 저항지였다. 이로 인해, 조선조 내내 세 번이나 여수가 폐현(閉縣)되어 순천에 복속되었다가 다시 복현(復縣)되는 등 이른바 삼복삼파(三復三罷)의 수난을 겪게 된다.

그런가 하면 임진왜란 때에는 삼도수군총사령부가 자리하여 여수의 민중들은 이순신 장군과 함께 병력은 물론이거니와 병참, 병기 등 모든 전쟁수단을 자급자족으로 실현해 내면서, 그야말로 의식주 삼중고를 겪으면서도

죽을 힘을 다해 나라를 지켜 왔다. 그래서 이순신은 여수를 비롯한 호남의 의기를 일컬어 약무호남시무국가若無湖南是無國家¹라고 까지 했다. 경천동지하는 구한말 동학농민혁명 대오에도 어김없이 이 땅의 민중들은 저항의 주체로 참여하기를 망설이지 않았고, 일제 시대의 독립운동에도 이 땅의 피끓는 젊음들이 그러했다. 해방 후 현대사의 질곡인 여순사건 당시에도 제주 파병을 거부하면서 민족이 민족을, 동포가 동포를 죽일 수 없다는 대의에 크게 호응한 지역의 역사는 가히 저항과 항거의 역사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여수의 정체성과 운동의 방향

1. 역사적 정체성과 운동의 설정

여수의 정체성은 지역의 역사가 말해 주듯 언제나 저항과 항거였다. 이를 어떤 식의 표현으로 승화해 내느냐가 우리 지역의 운동체가 담당해야 할 몫이 아닌가 싶다. 변화된 정세와 민주화 시대에 우리 지역운동의 발전방향을 지역의 정체성에서 찾고자 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 역사의식이 부재한 NGO들의 전환적인 사고를 의미하는 것일 게다.

그러한 측면에서 1998년부터 비로소 본격화하기 시작한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 사업은 여수 지역 최대의 쟁점이자 현안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지역공동체가 급속하게 붕괴되고 과거사가 해결되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역의 과거사를 정리하지 않고서는 오늘의 지역문제와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는 판단하에서였다. 그리하여 여수지역사회연구소를 중심으로 수년 동안 여순사건 관련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지금까지 세 권의 방대한 자료집을 편찬하고 위령제와 학술대회, 문화예술제를 바탕으로 지역의 여론을 움직이고 있으며 특별법 제정 작업에도 나서고 있는 것이다. 즉 타 지

1 '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는 뜻.

역의 경우에서 나타난 것처럼 여수 지역에서도 1948년 여순사건 이후 구축된 지역 내의 정치적 역학구조 및 그것에 대한 주민의 피해의식 등이 오늘날 지역사회의 민주화와 시민참여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는 점이 활동가들 사이에서 분명하게 인식된 것이다. 여순사건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나름대로의 재정적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의 당면 현안과 더불어 과거사 정리 작업을 동시에 수행한 결과, 지역운동이 어떻게 뿌리내릴 수 있는지를 경험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역의 반민주, 반인권, 연고주의와 관료주의를 뿌리에서부터 접근하지 못하는 시민운동은 문제의 표층에서만 떠돌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2. 반민족 세력의 권력과 부의 재생산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작업은 지역의 기억을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고 억눌린 기억을 되살리며 나아가 진정한 지역의 공동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라 볼 수 있다. 공동체성과 연대의식이 없이는 운동 자체가 성립할 수 없듯이, 지역주민 간에 피비린내 나는 상호 살육이 있었던 땅에서 공동체의식이 생겨나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사건 직후 피학살자의 남은 가족들은 ‘빨갱이’의 멍에에서 벗어나기 위해 거의 고향을 떠나 전국 도처로 흩어지거나 일본으로 떠났고, 그들이 남겨 두고 간 토지와 재산은 ‘적산’이 되어 가해자들의 손으로 들어갔다. 이후 가해자들은 ‘반공의 투사’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되었으며, 그 권력은 곧 허다한 이권利權, 즉 부를 가져다주었다.

여수를 비롯해서 전국의 어떤 지역이든지 그 뿌리를 캐고 들어가 보면 그 권력의 기반은 주로 일제 식민지 지배 및 한국전쟁 전후의 좌·우익 갈등의 산물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이야말로 ‘현재가 곧 역사’인 곳이고,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고 있는 곳이다.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지역 차원에서 맹아적으로 형성되던 시민사회의 수평적인 기반과 근대적 조직운동은

모두가 꺾멸되어 버리고, 운동세력은 지역적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다. 운동 세력이 사라진 지역의 정치·사회 공간에는 친일인사와 관료 및 경찰, 극우 반공청년운동세력, 권력의 꼬나풀에 기생한 기회주의적인 인사들이 조직한 각종 관변 조직들이 들어섰다. 이들은 중앙 권력과 수직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고리를 잡음으로써 권력과 물질적 부를 독점하게 되었다. 대체로 반복되는 대선과 총선, 지자체 선거에서 자신의 후보를 중앙의 여당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내고 이렇게 권력권에 접근한 사람들이 각종의 이권 사업을 독점함으로써 지난 50여년 동안 물적인 기반을 확보하였다. 오늘날 이들은 지역의 사업체와 언론, 각종 학교의 이사회, 단체장과 지방의원, 관변단체 등에 진출하여 확고한 지역권력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현실에서 여순사건을 재조명하는 사업은 매우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여순사건의 개요와 역사적 의미

1. 여순사건의 개요와 영향²

1948년 10월 19일 저녁, 전라남도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가 제주도 봉기를 진압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봉기를 일으켰다. 14연대 하사관 그룹은 제주도로 파병되어 동쪽을 죽일 수는 없다며 총구를 이승만 정권으로 돌렸다.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하는 신생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진 지 두 달이 지났을 때였다. 14연대 하사관들이 주도한 봉기는 순식간에 일반 장병들의 동의를 얻었으며, 다음날 여수와 순천을 점령했고 곧이어 전남 동부 지역 수 개 군으로 번져 나갔다. 여수와 순천에서는 봉기군의 엄호 아래 인민위원회가 개건되었고 기초적인 '인민행정'이 실시되었지만, 진압군이 즉각 투입되어 23일에는 순천이, 27일에는 여수가 완전히 진압되었다.

2 김득중, 「여순사건과 민간인 학살」, 『제6회 동아시아평화인권국제학술회의 여수대회 자료집』, 2002, 155~158쪽 참조.



통곡하는 아낙을 바라보는 미군 - 사진제공 KBS다큐멘터리

하지만 여수와 순천이 진압되었다고 해서, 봉기군이 완전히 전멸한 것은 아니었다. 14연대 봉기군과 남조선노동당 등의 지방 좌익 세력 등은 부근의 산악지대인 지리산에 입산하여 빨치산 투쟁을 계속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남쪽에 세워진 후 2개월만에 일어난 여순사건은 1946년 미군정하에서 일어났던 '대구 10월항쟁'이나 1948년 '제주 4·3항쟁' 보다 훨씬 더 큰 정치·사회적 영향을 남한 사회에 미쳤다. 특히 반이승만 정치세력에 대한 지배정권의 공세는 여순사건을 계기로 급속하게 강화되었고, 한반도 남쪽을 지배했던 미군의 철군정책도 변화되었다.

미군은 14연대의 봉기를 진압하는 데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10월 20일 국방부장관, 군 수뇌부와 함께 긴급회의를 가진 미군은 광주에 토벌사령부 Task Force를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봉기 진압을 위해 최신 군사장비를 지원하는 한편 군사고문단원으로 하여금 작전과 정보 분야에서 국군을 '지휘'하게 했다.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봉기에 맞서 적극적으로 개입한 미국 덕분에 여순탈환 작전은 빠른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³ 14연대 봉기와 뒤이은 빨치산 투쟁으로 이승만 정권의 위기가 눈앞에 펼쳐지자 미군 철수는 1949년 6월 말에야 비로소 이루어졌다.

국회는 반대파를 관제 공산당으로 몰아 처벌할 수 있다는 소장파의 우려와 강력한 반대를 뿌리치고 여순사건 뒤 한 달 보름만에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 1949년 1월부터 9월 말까지 형무소에 수감된 사람들 중 80% 이상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되었다.⁴ 국가보안법은 현재까지도 남아 있는 반공국가 유지의 가장 중요한 법적 제도이다.

한편 군대의 사회적 영향력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해졌다. 여순사건 진압에는 대북 경계병력과 제주도 진압병력을 제외한 전 군대가 작전에 투입되었다. 이를 통해 연합작전의 경험을 익힌 국군은 국방경비대 시절 경찰에 억눌려 지내던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 경찰뿐만 아니라 전 사회에 압도적인 규정력을 갖게 되었다.⁵ 군인들이 반역적 봉기를 일으켰다는 사실은 이승만 정부가 즉각적으로 좌익 혐의 군인들을 숙청하고 군대를 반공 이데올로기로 무장시키는 데 좋은 구실로 이용되었다. 숙군으로 처벌된 장병은 당시 전체 군 병력의 5%나 되었고⁶ 이 공백은 해방 후 난립했던 청년 테러 단체의 젊은 조직원들이 대거 군에 들어옴으로써 메워졌다. 이들은 1946년부터 반공투쟁의 최전선에서 활약하던 반공주의자들이었다. 이러한 인적 기반을 기초로 한 한국군은 한국전쟁을 거친 뒤에는 가장 강력한 반공조직으로

3 여순봉기에 대한 논문을 최초로 발표했던 桶口雄—는 여순봉기가 미군에 반대했던 봉기임을 상기시키며, 여순봉기가 국민당을 지원했던 미국과 싸운 중국 인민의 투쟁 그리고 프랑스 제국주의와 싸운 베트남의 독립해방 투쟁과 공통의 과제를 가진 투쟁이었다고 평가했다. 桶口雄, 「麗水·順天蜂起」, 『朝鮮研究 62』, 1967, 37~38쪽.

4 《한성일보》, 1949.12.4; 《국도신문》, 1949.12.24.

5 여순사건을 진압한 군 장교들—송요찬, 함병선, 백선엽, 김점근, 박정희 등—은 이후 주요 요직을 거치며 한국 사회의 중심인물로 활동했다. 桶口雄, 「麗水·順天における軍隊蜂起と民衆」, 『海峽 4』, 社會評論社, 1976, 74쪽.

6 박정희는 여순사건 진압을 위한 토벌사령부의 일원으로 광주에서 활동했지만, 봉기가 진압된 직후에는 좌익 혐의로 체포되어 사형을 언도받았다. 그러나 군부 내 좌익조직 명단을 제공한 것과 만주군 출신의 군 지도부와 제임스 하우스만(James Hausman)이라는 미 군사고문 단원의 구명운동으로 생명을 건지게 되었다.

자리잡을 수 있었다.

여순사건을 철저하게 진압한 이승만 정권은 공산주의 세력과 북한의 침략성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11월 초에 극우인사들을 포함한 반이승만 세력을 대대적으로 검거하는 한편 반공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한 주민통제체제를 하나씩 만들어 가기 시작했다. 1949년에는 가구 구성원 외에 다른 사람이 집에 머물면 경찰서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유숙계(留宿屆) 제도를 실시했고, 좌익들을 선도와 회개시킨다는 명목으로 보도연맹(保導聯盟)을 조직했다. 1949년 1월에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호국군을 편성하여 4개 여단을 창설하였다. 각 학교에는 군 장교가 파견되어 준군사조직인 학도호국단을 만들었다. 이승만 정권은 여순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학계, 교육계, 언론, 공무원, 사법계 등에 대한 대대적인 좌익 색출 작업을 벌여 혐의자들을 쫓아냈다.

이같은 좌익 색출과 치밀한 주민통제체제의 확립은 정권 존립의 위협에 처했던 이승만 정권이 여순사건을 성공적으로 진압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킨 자신감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언제 솟구칠지 모르는 봉기에 대한 사전예방책이었다.

이승만 정부는 여수와 순천이 진압된 직후부터 반공체제의 확립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진행시켰다. 다음 해에 발생한 김구 암살과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가장 강력했던 반이승만 세력이 완전히 숙청되면서 이승만 반공체제는 안정화의 길로 들어섰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이승만 정권이 공산주의자 척결을 자신들의 목표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공산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이승만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 일체를 척결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입장은 여순사건 초기부터 적용되었다. 봉기에 협력했다는 혐의를 받은 관련자들이 모두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

여순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아무런 재판도 없이 단지 14연대 봉

기에 협력했다는 혐의만으로 국민학교 운동장이나 해안 절벽, 산기슭에서 죽어 갔다. 누가 죽었는지, 누가 죽었는지, 왜 죽어야만 했는지도 분명히 밝혀지지 못한 채 55년 동안이나 이 사실이 침묵 속에 묻혀 왔다는 사실은 민간인 학살이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한국 사회와 현대사 속에 깊이 각인된 것이라는 점을 일깨워 준다. 죽은 사람들이 죄 없이 죽어 갔다고 해도 ‘빨갱이’라는 죄로 죽었다면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입 밖에 낼 수 없는 이야기가 되었던 것이다. 심지어는 여수, 순천 지역 출신이라는 단 한가지 이유만으로도 사상이 의심스럽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에서 여순 사건은 봉기의 측면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학살의 측면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이라 할 수 있는데, 학살은 봉기 실패에 따른 결과였다.

여순사건은 지역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14연대 봉기군이 들어왔을 때에는 우익 인사와 경찰들에 대한 처형이 이루어졌고, 진압작전 때에는 협력자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원한으로 협력자를 지목하여 처형하는 바람에 지역사회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다. ‘나서면 다친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진보적 사회운동의 싹은 잘려졌고 이데올로기에 일부러 냉담한 태도가 퍼져 나갔다.

나아가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여순사건에 대한 신문 보도 등을 통해 한국 사회 전체가 유혈적인 좌우 갈등을 간접 경험하였다. 해방 직후 나타났던 좌우 대립은 이제 일방적인 좌익 세력 척결로 바뀌었고,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공포심과 적대감 또한 높아져 갔다. 여순사건에서 나타난 유혈적 갈등과 민간인 학살의 양상은 2년 뒤 한국전쟁에서 전면화되었다.

여순사건은 이승만 정권의 반공국가 형성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남한의 반공국기는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더욱 고정화되고 강화되었다. 여순사건과 한국전쟁은 이후 남한 사회가 작동하는 원형을 만들었던 것이다.

2. 여순사건에 대한 인식의 관점과 변화양상

여순사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인식의 관점들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반공적인 관점으로 여순사건의 일체를 좌익 활동과 연계하여 거의 절대적으로 불온시해 왔던 시각이다. 이는 개인의 행복과 인권이 아닌 안정된 국가운영만을 중요시한 결과로서 당연하게 반변혁적 입장을 취해 온 형태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의 정부는 반공 이데올로기를 국시로 내세워 일체의 비판적 반정부, 반체제 활동을 ‘빨갱이’ 소행으로 몰아붙이면서 틈만 나면 ‘마녀사냥’을 해 왔던 것이다. 그 점에 있어서 단연 일등 공신은 보수 정객들과 논객들이었다. 따라서 여순사건의 경우에도 좌익 및 부역 혐의와 지방 좌익의 극렬 활동에 그 초점을 맞추어 선전해 온 것이다.

둘째는 변혁적, 구조적인 관점이다. 이른바 80~90년대의 운동권적 인식으로 이는 그동안의 좌익 활동을 선형적 내지는 기계적으로 파악한 귀결이다. 좌익 활동의 명분과 의의를 인정은 하지만 밑으로부터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문제는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민중의 역사라기보다는 차라리 조선공산당(남로당)의 역사에 가까운 관점을 가져왔다.

셋째는 인권과 평화의 관점인데 이는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으로 여순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단순하게 여순사건의 인적·물적 피해상황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관념적인 휴머니즘적 관점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었으나, 다행스럽게도 국가 폭력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중시하면서 이에 대한 극복책을 찾아내는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국가와 폭력의 뗄 수 없는 관계에 주목하고 있는 관점이라 하겠다.

3. 지금까지의 정부의 대응

지금까지 여순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정부는 할 수만 있다면 사건을 최대한으로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 했다. 그 중에서 거창양민학살, 제주 4·3의

에에서처럼 극히 일부 사건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좌익이나 좌익 혐의자 및 통비분자를 제외한 소위 양민으로 분류되는 우익의 피해에만 국한하여 해결하려는 의도를 보여 왔다고 하겠다. 실령 피학살자가 좌익으로 분류된 자라 하더라도 적법한 사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의 폭력과 희생은 당연히 불법적인 조치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에 대한 진실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민간인 학살의 문제 해결은 실제적인 배상과 진상규명 그리고 명예회복이 아닌 개인적 보상에 치중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진상규명 차원이 아닌 개인적인 민원처리 수준으로 격하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최근에도 2000년 7월 17일 국방부가 국민해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왔던 국방군사연구소의 민간인 학살 조사가 군의 명예를 훼손한다 하여 사건의 축소·은폐를 지시한 내부문건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문화일보》, 2000. 7. 25), 이에 대한 지역과 전국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항의가 잇따르기도 했다.

여순사건에 대한 정부의 관점이 이렇다 보니 그 피해자와 유가족은 지금까지 냉전 이데올로기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채, 국민 혹은 민족의 구성원으로 대접받지도 못한 채 죽은 목숨처럼 생명을 부지해 왔던 것이다.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운동

55년 전, 여순사건으로 인해 슬하게 죽어 간 원혼들을 위해 반세기가 지난 지금 각계의 노력으로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여순사건 당시 국군과 경찰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의 실체와 진실을 밝히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운동은 사건의 의미와 규모에 비해 그 연구 실적과 활동이 거의 전무한 편이었다. 진상규명운동은 크게 보아 1998년 전후로 분류할 수 있는데, 98년 이전에는 주로 일부 향토사가들에 의해 명칭 변경에 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졌다. 이는



붙잡힌 순천의 반란군 및
가담자들을 가려내기 위해
심문하는 진압군경-사진제
공 이경모

14연대에 의해 촉발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국군의 명예가 실추된다 하여 '여순반란사건'이라 이름 부르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따라서 '14연대반란' 또는 '여수14연대반란사건'으로 불러야 한다는 움직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지난 1998년, 사건 발발 50주년을 맞아 여순사건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자 여수지역사회연구소가 피학살자 실태조사를 전면화하면서 연구와 진상규명운동이 본격화되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당초 광주와 제주 및 거창의 예에서처럼 이 사건을 개별사건으로 풀어 나가는 방식을 취하여 왔다. 그러나 이들 사건들이 특별법이 제정됨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더 나아가 과거청산과 역사바로세우기보다는 여전히 지역적 차원의 개별사건 내지는 개별적인 민원 처리 수준으로 격하되는 양상을 보면서 전환적인 사고를 하게 되었다. 역사의 기억과 복원을 위해 여순사건의 제대로 된 실체와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가폭력에 관련된 해방 전후의 공간과 한국전쟁 전후 시기의 민간인 집단 학살사를 동시에 관통하는 폭넓은 한국 현대사를 그 중심에 놓지 않고서는 사건의 전모와 실체를 도저히 파악할 수 없음을 깊이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에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지역의

연대모임과 함께 전국연대모임을 동시에 구상하게 되었다.

지역의 연대모임으로는 2001년도에 결성한 '여순사건 민간인 학살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여수지역 사회단체협의회'와 '여순사건유족회' 및 2003년도에 결성한 '여순사건 화해와 평화를 위한 순천시민연대'가 구성되어 활동을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연대모임을 구축해 나가고자 여순사건유족회를 중심으로 하는 전국적인 조직인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를 결성하여 전진 배치시켜 나갔다. 그러나 전국의 피해유족들과 시민단체의 개별적인 활동으로는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이 힘에 부쳤고 전 국민적인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2000년 9월 7일 학계와 종교계, 시민단체, 유족 등이 참여하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이하 민간인학살범국민위)의 조직을 결성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2000년 11월부터 추진 중인 중인 민간인 학살 통합특별법안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한국전쟁이 끝날 때까지 군인·경찰·국제연합군 등의 작전 수행과정에서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것으로,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관련기관 등을 검찰에 고발하는 제재 방법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런 취지에 공감한 정치권에서도 지난 2000년 11월부터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모임'을 중심으로 두 차례의 공청회를 민간인학살범국민위와 공동 개최하는가 하면, 여야 국회의원 16명도 지난 2001년 6월 2일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하기에 이른다.

민간인 학살 반세기, 1960년 4대 국회에서 '국회 양민학살 진상조사특위'가 5·16 박정희 군부쿠데타에 의해 해체된 지 실로 40년만에 부활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운동은 2003년 들어 더욱 더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2003년 2월, 거창에서는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운동 관계자들이 국내의 여러 정세요인을 감안할 때, 2003년 내로 민간인 학살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향후 3년 정도는 입법이 어렵다는 자체 정세분석하에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전국 유족 및 활동가 수련회를 통해 특별법 입법을 위한 총력 투쟁을 결의하였다. 이를 계기로 2003년 2월 27일부터 6월 20일까지 국회의사당 부근의 한나라당사 앞에서 114일간 장기 노숙 투쟁을 전개하면서 수많은 성과를 도출해 냈다. 세 차례에 걸친 국가인권위원회에의 집단 진정, 인권단체들의 지지 성명에 이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국 각계 1천인 선언 등 수많은 단체들의 지지 성명이 잇따랐으며, 농성 기간 중 전주형무소와 김천형무소의 재소자 집단학살지를 발굴하여 사회 전반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투쟁 속보를 30호까지 발간하자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해 오던 각종 언론매체들에서 70여 차례나 민간인 학살이 보도, 기사화되는가 하면, 라디오와 TV에도 30차례나 방송되어 40년만에 부활한 진상규명운동은 이제서야 비로소 사회적 이슈와 공론화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2000년부터 민간인 학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이후, 특별법 제정 입법운동은 거의 성사될 수 있는 상황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불행히도 2003년 6월 막바지에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배신과 합의 파기로 인해 일정 기간을 다시 지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리고 지난 2003년 11월 거의 1년여 만에 가까스로 태동한 과거사특별 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순사건특별법안을 포함한 전국 민간인 학살사건 통합특별법안을 누더기가 된 채로 심의하여 2004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또다시 한나라당의 조직적인 반대 당론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다.

맺는말

결론적으로 한국전쟁 전의 대표적인 학살극이었던 여순사건은 '제주 4·

3' 과 함께 진압과 토벌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여순사건은 4·3사건의 연장선에서 발생했다. 14연대 병력 대다수인 2천여 명의 군인이 참여한 봉기는 이 지역 좌익 세력들이 가세하면서 순식간에 민군봉기로 발전했다. 그런 만큼 여순사건 진압에 나선 군경은 보복적인 테러, 학살, 약탈, 방화를 대대적으로 진행했다.

여순사건의 희생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다만 전라남도 보건후생부의 이재민 구호자료는 당시 여수를 포함한 7개 지역에서 2,634명이 사망하고 4,325명이 행방불명됐다고 기록하고 있다. 총 7,000여 명이 희생된 것으로 나타난 정부의 기록과는 달리 여수지역사회연구소가 피해실태를 조사했거나 현재 조사하고 있는 피해 통계 추정치는 10,000여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순사건은 기존의 정치 사회적 지형을 변형·강화시키면서 남한 사회의 기본질서가 구축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그러나 여순사건이 일어난 지 55년이 지났지만, 이 사건의 사실과 실체에 대한 규명은 아직도 요원하다. 55년이 지나도록 말없이 묻혀 있는 죽은 자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산 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울려 퍼질 수 있는 날은 언제인가?

여순사건과 같은 해에 일어난 '제주 4·3'의 경우 특별법이 제정, 시행되어 최종진상보고서가 발표되었고 지난 2003년 10월 31일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도 현지에서 정부 차원의 사죄를 한 바 있다. 이러한 '제주 4·3'의 움직임은 여순사건을 돌이켜 보는 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리 역사는 학살의 역사적 사실 자체마저 또 다시 '학살' 했다. 학살사건의 본질과 책임은 철저히 은폐, 왜곡된 채 주로 좌익 측에 의한 우익 인사의 학살 사실만이 일방적으로 강조되었고, 사실을 들추어내는 것 자체가 반국가적인 행동이 되었다.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은 '생존'을 위해 반세기를 침묵해야만 했다.

여순사건의 민간인 집단학살은 국가의 목적 자체를 상실한 야만적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대국민 테러행위로, 어떠한 명분으로도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 전쟁 중이라고 해도 비무장, 비전투 민간인의 생명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인류전쟁사의 교훈이고 제네바 협약, 제노사이드 협약 등 국제 평화와 인권협정의 근본 취지이다. 이것이 상실되면 전쟁의 목적 자체가 정당성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여순사건의 진실규명은 민족적 차원에서는 '민족 정기의 회복'을 의미하는 일이다. 55년 전 이념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서 저질러진 과거의 서글프고 부끄러운 자화상을 드러내 진실을 말하고 반민족적 죄악에 대해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내려 굴절된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야말로 민족의 양심을 회복하고 민족정기를 고양해 내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현대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데올로기'가 아닌 '민족과 인권'의 문제로 학살의 본질을 인식하려는 태도가 요구되며, 일반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수적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운동은 17대 국회에서도 계속될 것이다. 새롭게 변화된 정치정세 아래에서 이를 올바르게 이끌어 갈 노무현 참여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역사에는 시효 만료가 있을 수 없으며, 진실을 말하지 않고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80년 광주의 민간인 학살은 일제의 잔재와 친일파를 척결해 내지 못하고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학살을 방치하거나 모른 채 해온, 민족 내부의 모순이 확대·재생산되어 온 결과에 다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이영일 yosuicc@hanmail.net |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여순사건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소장,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전국사회단체협의회 집행위원장 및 동아시아 인권과 평화국제회의 한국위원회 사무국장.